

월요논단



김영호
한국박물관학회 명예회장·미술사가

제주돌문화공원은 제주를 대표하는 영적인 공간이다. 제주 자연이 낳은 현묘한 화산암과 꽃자왈 원시림 속에 녹아든 설문대할망 신화는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해 왔다. 그중에서도 돌박물관 옥상에 자리한 ‘하늘연못’은 과연 백미다. 지름 40m의 황동 그릇에 제주의 하늘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자연과 인간과 신화의 합일을 예술적으로 구현한 걸작이다. 20년의 세월 동안 황동 테두리가 산화되며 빛어낸 무채색의 깊은 색깔은 주변 풍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돌문화공원 하늘연못 보수 논란, ‘문화재단’ 설립이 답

그러나 개관 20주년을 맞은 올해, 하늘연못이 변질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테두리는 ‘아스팔트 도로 위의 중앙선을 연상시키는’ 노란색 페인트로 덧칠되었고, 바닥은 일반 건물의 옥상에 사용하는 방수용 연회색 페인트로 뒤덮였다는 내용이다. 자연의 시간과 숨결을 느낄 수 있던 ‘하늘을 담은 그릇’이 정체불명의 인공 시설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다. 문화유산에 속하는 황동 시설물에 이질적인 화학페인트를 덧칠하는 보수 방식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시민 건의문과 언론보도를 통해 논란이 일자, 관리소 측은 누수와 안전 예방, 미관 개선을 위해 색상을 고민해 선정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 다수와 언론은 이에 대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가 낳은 참사’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돌문화공원의 잔혹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건립 당시의 ‘민관합동 추진체제’에서 제주도 단독의 ‘공무원 소장 직영체제’로 전환된 이래 시민과 언론의 비판이 지속적 으로 제기돼 왔다. 플라스틱 재질의 하트 모양 포토존 조성, 하늘연못 주변에 사람의 자물쇠 철망 거치대 설치, 전기차 대합실 및 난개발 강행에 따른 도의회 예산의 전액 삭감 등은 겉으로 드러난 사례일 뿐이다. 설문대할망전시관 조성을 둘러싼 정체성과 소장품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언론들은 이러한 잔혹사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1~2년 주기로 소장자리를 거쳐가는 ‘공무원 순환보직 체제’의 한계로 지목하고 있다. 조례에 명시된 민간자문이나 명예원장 제도도 ‘전문가 패

싱’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언론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제 공원의 운영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때다. 그 핵심이 ‘돌문화공원문화재단’의 설립이다. 문화재·미술·조경·건축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독립 재단이 출범할 때, 정권이나 소장의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보존 원칙을 확립할 수 있다. 제주4·3평화공원을 관리·운영하는 제주4·3평화재단의 사례는 모범적 대안이 될 것이다.

제주돌문화공원은 미래 세대에 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문화적 자산이다. 하루빨리 지방정부의 독점적 행정 관리 체제를 탈피하고 전문 문화재단 체제로 전환해, 돌문화공원이 지닌 신화적·예술적 가치를 보존하고 숙성시켜야 할 때다.

사설

도민과의 약속,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위성군 제주지사가 6·3 지방선거 당시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제주농수산물유통공사와 도민투자공사 설립을 사실상 철회했다. 당선 이후 공사 설립 대신 별도 기구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경쟁 후보는 조직 비대화와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공기업 설립에 반대했으나 위 지사는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공약을 고수했다. 이러한 강력한 추진 의지는 농민을 비롯한 도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큰 동력이었다.

물론 공약이 집권 이후의 현실적 여건과 제도적 제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는 있다. 예상치 못한 정부 정책의 변화나 법률 개정,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부담 등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면, 계획을 수정하거나 철회하

는 것 역시 책임 있는 행정이다. 하지만 공약 발표 당시와 비교해 현재의 정책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핵심 공약을 취임 직후 사실상 철회한 것은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이는 결국 공약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현실성 검증 없이 오직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유권자 기만용 공약이었음을 스스로 방증하는 셈이다. 더욱이 앞으로도 공약 철회가 반복된다면 도정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게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면 도민들에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공약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도민과의 약속을 존중하는 도정의 기본 자세다. 도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도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열린마당

시원한 공간, 그 시작은 ‘화재예방’에서

박대현
서귀포소방서 대신119센터

공간에 모여 있어 서로의 열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을 만들기 위해 영업주와 관리자는 다음의 안전 수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첫째, 에어컨 등 고전력 기기는 반드시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배전반 내 먼지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전류 누출을 막아야 한다.

둘째, 실외기 주변에 쓰레기나 적치물을 치워 통풍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셋째, 화재 발생 시 대피 통에 장애물이 없도록 비상구와 피난계단을 항상 비워두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은 그 공간을 만들고 찾는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다. 시설 관계자들의 철저한 안전 점검과 시민들의 높은 안전의식이 결합될 때, 비로소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여름철 도심 환경이 완성될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도,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우수’

예방·현장대응력 강화 성과 자동차세 징수율 역대 최고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의 2026년 재난관리평가에서 광역 지방정부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와 포상금, 정부포상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정.

재난관리평가는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량과 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하는 재난안전평가제도로 제주도는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계와 현장 대응력을 꾸준히 강화한 점에서 재난관리평가위원회의 높은 평가를 받음.

양재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기후위기로 재난의 규모와 양상이 복잡화되는 만큼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와 현장 대응체계를 더 강화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강조.

오소범기자

○…서귀포시가 올해 6월 정기원 자동차세 부과분 79억4200만원 가운데 68억5000만원을 징수하며 남기 내 징수율 86.3%를 기록,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징수율 79.3%보다 7%p 상승한 수치로, 이번 성과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디지털 기반 행정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로 분석.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이뤄진 6월 기준 자동차세 징수율은 2024년 74.2%, 2025년 79.3%, 2026년 86.3% 등 매년 높아지고 있다”며 “다양한 징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해양보호구역 지정만 해놓고 관리는 뒷전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경관이 뛰어나 보전할 가치가 높은 해역을 법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제주에서는 관할 해역의 11.6%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이 폐어구로 인한 생태계 훼손이 심각하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최근 ‘제주 해양보호구역 폐어구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 16곳의 50개 조사지점 가운데 92%인 46곳에서 폐어구가 발견됐다. 폐어구는 모두 37종 1661개였다. 폐어구에 얽혀 죽거나 다친 해양생물은 23종 183개체로 집계됐다. 피해 생물 가운데 6종은 남방큰돌고래, 밤수지맨드라미, 해송 등 해양보호생물로 확인됐다. 이는

해양생물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서도 폐어구로 인한 생태계 훼손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양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침적쓰레기는 낚시줄이었다. 육상에서는 플라스틱 부표가 전체 해양쓰레기 중 3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수중에서는 낚시줄이 23.4%로 가장 많았다.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만 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기준 해양보호구역 14곳 중 행정 계획에 따라 실제 관리가 이뤄지는 지점은 한 곳뿐이다. 특히 레저낚시로 인한 피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레저낚시를 관리하는 제도나 지침은 없다. 제주도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강화와 폐어구 발생 저감 방안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상속한정승인 공고

• 피상속인 : 망 김종옥(1981. 01. 09. 생)

• 최후주소 : 제주시 연동10길 16, 1415호 (연동)

• 등목기준지 : 제주 서귀포시 표현면 일주동로 6302의 6

상기자는 2026년 3월 5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은 2026년 7월 8일 제주지방법원 2026노단5340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제주시 해안마들2길 25-14, 101호 (해안동)

2026. 7. 13.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오인순

상속한정승인 공고

• 피상속인 : 망 현달형(1957. 03. 29. 생)

• 최후주소 : 제주시 거로남3길 13, (화북이동)

상기자는 2026년 2월 24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은 2026년 6월 24일 제주지방법원 2026노단231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서울 관악구 양녕로64길 25-4, 101호 (봉천동)

2026. 7. 13.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현승희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등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도택이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목성콜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8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릉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예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 장 의 사 616-08-85402